

보도시점 2026. 1. 20.(화) 12:00 (수요일 조간) 배포 2026. 1. 19.(월)

## 계절관리제 도입으로 녹조 걱정 덜어 드리겠습니다

- 녹조 계절관리제 도입, 재자연화 본격화, 연계·협력을 통한 홍수 대응체계 강화, 물이용 체계 혁신 등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강(江) 조성...주요업무 계획 공개
- 대한민국이 탈탄소 문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물 분야 탄소중립 선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2026년) 물 분야의 빈틈없는 업무 추진을 위해 물관리정책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지난해 새정부 출범 이후 6개월 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규댐 후보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자연화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등 강(江)의 자연성 회복을 추진했으며, 녹조 검사체계를 개편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근본적인 물 환경 개선을 위한 수질오염원 관리를 강화했다. 홍수예보 고도화, 배수 시설(빗물받이 등) 관리 강화, 대체수자원 확대 등을 통해 극한 홍수·가뭄에 대한 대비 체계를 구축하고, 작년 7월 임하댐 주민참여형 수상 태양광 발전을 개시하는 등 물 기반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를 확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의 성과를 확산하고, 각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물 관리 업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물 환경 조성, △빈틈없는 이·치수 관리체계 수립, △지속가능한 물 관리 역량 강화, △탄소감축형 물 관리 체계 전환이라는 4가지 핵심과제 아래 다음과 같이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했다.

### 핵심과제 1.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물 환경 조성

#### 1 계절관리제 도입 및 근본적 수질개선 추진

그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숙제로 남아 있던 낙동강 등의 녹조 및 수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오염원 원천 감축]** 하·폐수 등 점오염원 감축을 추진한다. 폐수처리를 위해 낙동강 폐수의 62%를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 7곳을 대상으로 오존과 활성탄을 사용한 초고도 처리 공정 도입을 추진한다. 하수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하수처리장 도입을 확대하고, 작년 12월 개정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강화에 대비하여 시설 개량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농업지역 비점오염원 또한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퇴액비 관리 강화를 위해 야적퇴비 관리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고랭지밭 관리를 통해 도암호 수질 개선 또한 본격 추진한다. 농식품부와의 협업을 통해 최적관리기법 등 친환경 농법을 확산시키고, 올해 낙동강·영산강 유역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 5곳의 설계·공사를 착수하는 등 농·축산 밀집지역 등에 처리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오염물질 감시(모니터링)와 총량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9월 금강 수질 측정센터 준공에 이어 2027년까지 수질측정센터를 4대강 전역으로 확대하고,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미량 미규제 물질 측정·공개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난분해성 유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질오염총량제 총유기탄소(TOC) 시행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녹조 안전관리체계 구축]** 선제적 녹조관리를 위해 1차 녹조 계절관리제를 도입·운영한다. 중앙 및 보별 추진단을 구성하여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트윈(DT)을 활용한 대책 효과 시뮬레이션을 추진한다. 녹조 심화 시기 물 흐름 개선 및 녹조 신속제거를 위해 낙동강 보 일시 개방·담수 조치를 시행한다. 봄·가을의 야적퇴비 조사를 확대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강화·운영 등 오염원 관리에도 힘쓴다.

조류독소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기·농산물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해 시민사회·전문가와 함께 조류독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공기 중 조류독소의 인체 영향 확인을 위한 장기 위해성 평가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녹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도입한 녹조 조류경보제 신속 발령 체계(당일 발령 및 취수원 인근 정보 제공)를 낙동강 이외 한강·금강 등의 다른 수계로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호수공원과 저수지에도 녹조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 2 강(江)의 연속성 회복으로 건강한 생태하천 조성

물은 흘러야 한다는 원칙 아래, 과학적 분석과 지역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재자연화 및 신규댐 추진 방향을 적극 설정하고, 수생태계를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을 조성한다.

**[실효적·실용적 재자연화]** 먼저,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이행안(로드맵)을 올해 안으로 수립한다. 지역의 물 이용 여건과 보 개방 실증 등을 통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 별 처리 이행안을 마련한다. 안정적인 물 이용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올해 확보한 470억 원 예산으로 취양수장을 신속 개선한다. 특히, 녹조 대응이 시급한 낙동강 유역의 취양수장을 집중 개선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관계기관 협의체 가동, 전문기관 위탁 등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

필요성 중심의 신규댐 재검토를 추진한다. 찬반의견이 첨예한 지천댐, 감천댐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대안검토 대상인 5개 댐(아미천댐, 가례천댐, 고현천댐, 병영천댐, 회야강댐)에 대해서는 용도, 규모 등을 신속히 재검토하여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48개 하천에 대해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평가도 실시한다. 조사·평가 결과에 따라 활용도가 낮고 수생태계 악영향이 큰 횡단구조물은 단계적으로 철거·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낙동강은 올해 하굿둑 개방일수를 전년(2025년) 190일 대비 200일로 확대 하면서, 연어·은어 등 기수종 복원을 추진한다. 금강과 영산강은 유역별 기수 생태계 복원 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4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연구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하천의 치수 기능과 더불어 생태 등을 고려하여 자연성 회복을 통합 추진할 수 있는 ‘자연동행 안심하천’ 사업모델을 올해 내로 발굴한다.

### 3 본류부터 가정까지 안전한 먹는 물

모두가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대구·부산 지역의 숙원이던 낙동강 물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본류부터 가정까지 전방위 수질오염 및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낙동강 물 문제 해결]** 복류수·강변여과수 기반의 새로운 대안 수질·수량 안정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한다. 현 대구 취수원 인근에 실증시설을 구축하는 등 안정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올해 상반기부터는 시설 특성을 고려한 대구시 내 최적 취수지점 또한 조사한다. 새로운 대안 확정을 위해 지역 수용성을 제고한다. 지역 언론 간담회,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를 추진하는 한편, 전문가 집단과 실증시설 운영 중간점검을 매달 진행한다. 국회 토론회를 통한 공개논의를 통해 당위성 또한 확보한다.

위 결과를 토대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설정한다. 대구·경북권은 실증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까지 결정하고, 부산·경남권 또한 대구·경북권 사업 경과를 발판삼아 올해 상반기부터는 사업 전환을 협의할 계획이다.

**[원수·정수장 관리 강화]** 수질사고 관리 및 감시를 강화한다. 대구시에 수질오염통합방제센터 설치를 2028년까지 완료하고, 지난해 38곳이었던 완충저류시설을 올해 45곳까지 확충하여 수질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낙동강 수계에 대해서는 미량·미규제물질 감시를 강화한다.

수돗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유충과 녹조로부터 수돗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수장 위생 점검과 조류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올해 1,013억 원을 지원하여 경북 김천시 황금정수장 등 46곳의 노후정수장의 개량·재건설을 추진한다. 수돗물의 과불화화합물(PFAS)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분석기술을 고도화(분석한계값 5 → 1ng/L 강화)하고, 현재 101개 정수장에 실시하는 감시체계(모니터링)를 전국의 427개 전체 정수장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분석법 고도화, 제거 기술개발 등 상수도 내 과불화화합물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 핵심과제 2. 빈틈없는 이·치수 관리체계 수립

### 1 극한호우에도 끄떡없는 홍수 방어망 구축

신규 기반시설 구축보다는 시설 간 연계,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홍수에 적극 대응하고, 홍수 예측 역량을 강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류·지천 등 홍수에 취약한 구간에 대해서는 정비·보강을 본격화한다.

**[연계·협력 강화]** 기존 물그릇을 연계한 홍수대응 기능을 확대한다. 수력·양수발전댐, 농업용저수지 등 기존 물그릇을 연계하고, 부처·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위급상황 시 더 많은 홍수를 저류할 수 있도록 한다. 댐·하천 디지털트윈(DT) 등을 활용하여 주요 물그릇의 홍수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20일) 전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로 홍수대응 실효성을 제고한다. 홍수안전강조기간(4월 15일~5월 14일) 운영으로 관계기관 간담회, 합동 모의훈련 등을 통해 홍수대응 협력을 강화한다. 홍수취약지구 지정 법제화와 이를 지방하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과의 협력하에 하천구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을 추진한다. 장마철 도심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지자체의 빗물받이 청소를 점검하고, 올해 신규로 확보한 1,104억 원 예산으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또한 적극 추진한다.

**[홍수 예측역량 강화]** 수위관측소 40곳의 신설 등으로 인공지능 기반 홍수 예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그동안 각각 운영되던 기상레이더(기상청)와 강우레이더(기후부)를 기상청으로 통합하여 올해 홍수기 이전부터 본격 운영한다. 강남역·신대방역 일원 서울시 6개 자치구에 ‘현장작동형 도시침수 예보 체계’를 구축하여 올해 홍수기부터 처음으로 대국민 알림 또한 시작한다.

**[취약구간 정비·보강]** 작년 12월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 사항(하천 구간별 중요도에 따라 방어 목표 자율상향)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3월까지 지자체에 배포하고, 6월까지 하수도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지류·지천과 노후 제방을 중심으로 정비 및 보강을 추진하고, 본류 수위에 영향을 받는 배수영향구간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추가 지정한다. 홍수 위험성이 높은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 우선순위를 올해 안에 도출하는 한편,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대심도 빗물터널 등 도심지 방어시설도 신속히 조성한다.

## 2 첨단산업,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물 공급 체계 혁신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반도체·인공지능 산업과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물 수요·공급 분석부터 배분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여 물 이용 효율을 높인다. 또한, 산업용수의 댐 의존율을 줄이고 대체수자원의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효과적 분석·배분]** 가용 수자원 극대화를 위해 물 수급 여건 분석체계를 고도화한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물 수지 분석모델을 개발하고, 산업용수의 수요 파악 및 관리를 체계화하고 정밀화한다. 물 수급 분석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물 수급 전문 분석기관 지정도 검토한다.

물 배분 관리를 내실화하고, 물 공급계획의 탄력성 및 정합성을 제고한다. 차관급 물 수급 협의체를 반기 1회 운영하여, 지자체·산업계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소통을 강화한다. ‘국가수도계획’ 변경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수도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 간 계획 연계 또한 강화한다.

**[자산지소\* 공급체계 강화]** 하수, 바닷물, 지하수 등 강수 의존도가 낮은 수자원을 지속 확보한다. 물 재이용 확대를 위해 국가가 물재이용 시설을 광역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물재이용법’을 개정하고, 판로지원 등 해수 담수화 활성화 방안을 26년 상반기 내 마련한다. 산업용수 공급용 지하수 저류댐 설치를 포함해 다목적용 지하수의 공공 활용 확대를 추진한다.

\*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그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뜻

발전댐, 생활·공용수 외 저수지 등의 용수용도 또한 확대한다. 화천댐 등의 발전용댐의 가용수량을 ‘하천수 허가제도’에 편입하고, 댐 방류수 사용요금을 합리적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생활·공용수 외 저수지에 대해서는 ‘물순환촉진사업’과 연계하여 저수지 용수 활용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운휴 수도시설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용수공급 등 다각적 활용 방안 또한 검토한다.

**[용수공급 효율성 극대화]** 인공지능 정수장의 고도화 및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등 물 공급 전 과정에 대해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한다. 해수담수화 시설을 재생에너지 등과 연계하여 단가를 낮추고, 인공지능 기반 운영으로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등 효율성을 강화한다.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초순수 생산공정 국산화 또한 추진한다.

### 3 사각지대 없는 물 관리 안전망 마련

도서·산간 등 물 공급·처리에 취약한 소외지역이나, 국가산단 등 물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물순환 촉진을 위한 제도도 시행한다. 토양·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수질 관리도 강화한다.

**[취약·소외지역 물 복지]** 하수 미처리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분뇨 수거비 지원 등 정화조 공공관리를 확대하고, 개인별로 처리하던 하수를 공공하수 처리장으로 일괄 이송·처리하는 마을하수저류시설을 지난해 12곳에서 올해 32곳까지 확대 추진한다. 도서지역 등 물 공급 소외지역에도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 공공 마을지하수 등 수원을 확보하고, 해수담수화 등 수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물 공급·처리 인프라]** 국가산단 등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올해 국비 73억 원을 지원하여 광역·공업용수도를 지속 확충한다. 지반침하 등 예방 및 누수저감을 위해 노후 상·하수관로 또한 신속 정비한다. 상수관은 싱크홀 예방을 위해 광역시·대도시 노후관망에 대해서도 정비를 확대하고, 누수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노후 송수관로에 대한 국비 지원 가능성도 검토한다.

하수관은 2030년까지 결함이 확인된 노후 하수관로 1,350km에 대한 교체·보수를 완료하는 한편, 추가 결함 구간의 확인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1.2만 km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도 순차 추진한다.

지역 물순환 개선을 위해 ‘물순환 촉진구역’ 4곳을 공모·지정하고, 지역 맞춤형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기업이 참여하는 워터 포지티브 활동을 통해 지역의 물 복원 활동 또한 적극 추진한다.

**[토양·지하수 관리]** 경제성 논리 기반으로 토양정화 체계를 개편한다.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지 않는 경우 기존 형벌 중심의 처분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여 자발적 정화를 유도한다.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현안 및 장기 미정화 오염부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신속한 복원을 지원한다.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한 지하수 수질·수위 관리 실시간 감시(모니터링) 시범사업, 지하역사 냉난방용 지하수열 활용 확대, 과불화화합물 등 새로운 오염물질에 대한 지하수 수질관리 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 핵심과제 3. 지속가능한 물 관리 역량 강화

#### 1 통합 물관리 실현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물 관리 계획·제도를 정비하고, 강별 특수성을 바탕으로 유역 중심으로 주도적인 물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한다.

**[계획·제도 정비]** 올해 하반기까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 수급 분석 등 사항과 4대강 재자연화 등의 국정과제 내용을 반영한다. 법정계획 효율화를 위한 일제 정비 또한 추진한다. 각 계획의 성격과 유사·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물 관련 법정계획의 통폐합을 위한 정비안과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 방안을 마련한다.

효과적 물 이용을 위해 물 사용량 관리체계 및 요금체계를 개선한다. 실제 용수 사용량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하천수 사용량 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하천수 사용량 계측 방식 및 정보 수집체계 개선(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수도서비스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요금체계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물값 심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한다.

**[유역 물관리체계 강화]**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다양한 물 분야 의견 수렴을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기 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 소통을 위해 세미나·포럼 등을 개최하는 등 물관리위원회의 협치(거버넌스) 역할을 강화한다.

유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수계기금을 활용한 환경 실천 운동 지원 방안 또한 마련한다.

## 2 체계적인 물 산업 육성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

물 혁신기술을 국가 연구개발(R&D)로 집중 육성하고,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실증화 시설 고도화, 혁신펀드 조성 및 혁신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물기업의 성장과 판로를 지원하고, 필리핀·태국·케냐 등으로 해외진출도 확대한다.

**[물 산업 육성]** 물분야 혁신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물관리 인공지능 활용, 첨단 수처리, 2차 단지 염폐수 처리 분야 등을 국가 연구개발(R&D)로 육성하고, 올해 내에 인공지능(AI) 정수장 등의 국제표준을 획득하여 세계 시장을 선점한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인공지능·바이오·초순수 분야 실증지원을 위한 시설 개선도 추진한다.

혁신기업 성장생태계 또한 구축한다. 혁신펀드 조성 추진으로 물 분야 유니콘기업을 육성하고, 40개 기업에 102억 원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등 미래 유망 물 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집중 육성한다. 국가사업 내 혁신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판로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필리핀 상하수도 개발 등 남반구 개발도상국의 물 산업 진출을 확대하고 태국, 케냐 등의 양자협력을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국제사회 개발협력 증진을 위해 물과학보고서의 작성(유네스코 발간)을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의 다자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 핵심과제 4. 탄소감축형 물 관리 체계 전환

### 1 기존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한 탄소중립 활성화

하천·댐·하수도 등 물 기반시설과 토양 등 환경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끌어나간다.

하천 내 육상태양광을 확대하기 위해 아라뱃길 자전거도로 내 제방안정성이 확보된 10km 구간에 12MW 규모의 태양광시설을 설치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치수안전성을 고려한 하천 내 태양광시설의 점용허가 기준을 마련한다. 환경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기존 댐을 하부댐으로 활용한 양수발전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하수열을 활용한 시범사업 추진과 열 공급 규모 결정 및 열교환기 설비기준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토양탄소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토양의 탄소 저장고 역할을 확대하고, 바이오차 등 토양탄소 추가 흡수·저장 기술 연구개발을 새로 추진한다. 토양의 탄소 저장고로서의 역할, 토양탄소 흡수·저장 기술 활용 확대 등 법적 근거와 성복토재 기준 등 마련을 위해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 2 주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 · 자립마을 조성

상수원 관리지역, 하천·댐 주변 수변공간 등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 내 주민들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지속 가능한 물 분야 탄소중립 모범사례를 확산시킨다.

상수원관리지역 내 재생에너지 기반 자립마을을 조성한다. 수계기금을 활용하여 상수원관리지역 내 수익배분형 태양광시설 등 재생에너지를 보급 및 확대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법령 개정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민 소득지원 목적에 한해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확대 허용한다.

댐 주변에 태양광, 히트펌프 등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단지를 조성하고, 임대, 발전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여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등 에너지 자립을 확산한다.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또한 확대한다. 댐 수면을 활용하여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고, 발전수익을 햇빛연금 형태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사업을 현재 3곳에서 2030년 11곳까지 확대한다.

### 3 지역·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물 재생에너지 확대

수열, 조력 등의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활용하여 지역·산업의 탄소 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또한 적극 추진한다.

수열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소양강댐 인근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수열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센터 부지를 올해 하반기 분양을 통해 입주기업 을 유치하고 잔여 부지에 대한 기반 공사를 추진한다. 대청 수열클러스터는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충주 수열에너지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을 올해 안으로 조속히 추진한다.

수열에너지 활용 또한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수열에너지 활성화방안’ 을 마련하여, 신규 택지개발 등 대단위 수열도입 가능 단지를 발굴·지원한다. 공동주택 대상으로 하남교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열에너지 신규 공급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한국무역센터 등 1차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추진 및 전국 수열지도를 작성하는 등 수열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도 병행한다.

새만금 조력발전 추진을 위해 새만금호 조력발전 사업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3월부터 착수한다. 새만금 기본계획 내 조력발전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올해 낙동강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수질 개선과 4대강 재자연화 본격화로 근본적 물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이·치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물 분야 기반시설을 활용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끝.

담당 부서 <총괄>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정용 (044-201-7611)
		담당자	서기관	이보형 (044-201-7612)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배연진 (044-201-7001)
		담당자	서기관	권준제 (044-201-7002)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형섭 (044-201-7140)
		담당자	서기관	허 헌 (044-201-7141)



2025	2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대강 16개 보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의견과 과학적 평가를 통한 16개 보 처리방안(로드맵) 마련(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댐(37개) 중심의 홍수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처·기관 소관에 관계없이 물그릇*을 최대한 연계 활용한 홍수대응 강화(强)</li> <li>* 수력양수발전댐 농업용 저수지 지자체 식수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천등급별 일률적 설계빈도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간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홍수방어목표 자율적 상향 설정 적용(强)</li> <li>※ 하천설계기준 개정('25.1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침수 대국민 예보 지역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 강남역·신대방역 도시침수 대국민 알림 시범사업(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침수우려지역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 누적 6.2만개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침수우려지역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 누적 26.8만개 설치(强)</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하수처리시설 시범사업 추진(12개소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하수처리시설 사업 본격 추진(20개소 추가 선정)(强)</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공습지 등 자연형 위주로 소규모 비점 오염저감시설 분산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경작지·축사밀집지역 등 고농도 배출지역 대상 고효율 비점시설(충인처리시설) 집중 설치(强)</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수원 상류 중심으로 녹조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수지·호수공원 등 생활 주변지역에 녹조 관리방안 마련(强)</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류수 수질기준 항목* 외 미규제·미량오염 물질 제거 공정 부재</li> <li>* BOD, TOC 등 7개 항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규제·미량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초고도(오존+활성탄) 도입 추진(新)</li> <li>* 낙동강 수계 내 산업폐수 유입 1만톤/일 이상 시설 중 성서공공폐수시설에 우선 도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낙동강 하구 기수역 조성(190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낙동강 하구 기수역 조성 확대(200일)(强)</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야적퇴비 관리기준 근거 미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야적퇴비 관리기준 근거 마련 추진(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누수저감(유수율 제고)을 위한 시·군 위주 노후관망 정비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싱크홀 예방을 위한 광역시·대도시 노후 관망 정비사업 신설(强)</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관련 개별법*에 근거한 정책 추진</li> <li>* 「수도법」(상수도), 「하천법」(하천시설) 등 7개 법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뭄·홍수 등 취약지역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 물문제 해소 위한 통합대책 수립(新)</li> <li>※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지자체 공모('25.12~'26.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먹는샘물 라벨 의무(국민안전 정보 11종 표기)</li> <li>* 다만, 플라스틱감량·소비자 편의를 위해 묽음 제품은 '20년부터, 날병 제품은 '22년부터 무라벨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먹는샘물 무라벨 제도 시행(新)</li> <li>* 필수정보는 용기에 직접 표시하되, 성분함량 등 표시정보는 QR(날병), 묽음비닐로 제공</li> <li>※ 오프라인 날병 판매는 전환 안내 기간(1년) 운영</li> </ul>